

# 北美회담 장소 ‘판문점’ 급부상… 文, 평화 운전대 잡다

**美 트럼프**  
판문점 북미회담 개최 가능성에 “전적으로 가능… 기념행사될 것”

**文 대통령**  
남북미·남북미중 회담 통한 ‘중전선인’ 화통점정 구상



북미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판문점에서의 ‘한반도 빅뱅’ 가능성이 급속도로 고개를 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성공으로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땅’으로의 면모가 부각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 비핵화 합의에 대한 또 다른 선언을 도출한다면 극적인 효과가 배가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동력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여부가 좌우될 ‘큰 판’의 ‘빅 플레이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담판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장소의 상징성이 이를 추동할 수 있기에 판문점이 더욱 부각되는 흐름이다.

애초 판문점은 북미정상회담 장소 후보지에서 배제되는 분위기였지만 이를 되살리는 과정에 문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합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공식 거론한 시점이 문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라는 게 그런 판단의 주요 근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많은 나라가 회담 장소로 검토되지만, 남북 접경지역인 평화의 집(PEACEHOUSE)·자유집(FREEDOMHOUSE)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일거라”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판문점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일이 잘 해결되면 제3국이 아닌 그곳에서 하는 게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는 진전된 언급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을 꼭 집어 언급한 것은 그만큼 판문점을 유력한 회담 장소로 고민한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기보다는 두 분 사이에 장소를 놓고 어디가 좋겠냐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며 “판문점 개최의 장단점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먼저 판문점 얘기를 꺼냈고 문 대통령이 그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판문점을 권했거나 설

득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다시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판문점 얘기를 꺼냈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판문점을 주요 옵션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한미정상이 북미회담 장소로서의 판문점을 놓고 대화를 나누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고민하는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포스트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이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미 간 가교역할을 하면서도 주도권을 유지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자’ 면모를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북미회담으로 고스란히 이어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를 통해 중전선인으로 ‘화통점정’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미 남북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작년 7월 독일 ‘베를린 구상’ 발표 이래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합의

를 끌어내고 급기야 북미 간 고민의 한 지점인 장소 결정에도 어느 정도 관여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가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논의했다는 것은 남북 정상 사이에서도 이 사안이 이미 논의됐을 거라는 추론을 낳는다. 이 경우 판문점 낙점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심으로 다뤄질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마다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식 해법’으로 불리는 일괄타결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비핵화 이전 보상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고수하는 북한 사이에서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이에 관해서도 현실적 절충안 또는 타협안을 북한과 미국에 각각 전달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북신과 대결에서 신뢰와 평화로 옮겨가는 대전환기의 이정표가 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중재자이자 협상가로서 얼마나 더 큰 역할을 할지 주목하는 시선은 그래서 지속되고 있다. /연남뉴스

## “모든 성장, 노동자 위한 성장이어야”

**文 대통령, 노동절 메시지**  
“주 52시간 노동, 휴식있는 삶 즐기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자신과 부모, 아들딸들이 바로 노동자들이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노동절 메시지에서 이 같이 강조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다.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은 숭고하다. 아버지의 손톱에 깎기름때는 삶을 지탱하고, 어머니의 손톱 밑 흙에서는 희망처럼 곡식

이 자란다”며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다. 지금은 당연히 생각해 주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작년 오늘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극복할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문제 그 핵심”이라며 “정부의 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연남뉴스

## 4월 임시국회 ‘빈손’ … 국회정상화 논의 시작도 못해

4월 임시국회가 끝내 빈손으로 끝났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일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독한 설전만 주고받았다. 국회 정상화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4월 국회의 발목을 잡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여전히 전한 데다 판문점 선언의 비준 문제를 둘러싼 충돌도 여야 대치 전선이 넓어지고 가팔라지며 5월 임시국회에도 암운이 드리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일방 소집한 5월 임시국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소집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검 수용을 전제로 임시국회에 응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임시국회 성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여권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심의나 절차를 무시한 채 여권이 비준 동의만 압박하며 반발하고 있어 이미 협력이 예고됐다.

5월 국회마저 파행으로 끝나면 각종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은 물론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 처리도 불발돼 출마 의원 공석으로 치러질 재보궐 선거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우선,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법률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국회 비준 동

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위식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지금 법제처에 의뢰해 (판문점 선언을 어디까지 비준 동의해야 하는지 등) 그런 구분을 해나가고 있으니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해나갈 생각”이라며 “저희는 당장 이것(국회 비준 동의)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회의 비준 동의 시점과 관련해 선택지를 북미정상회담까지로 확대한 것과 보조를 맞추는 행보로 읽힌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성급히 추진했다가 판문점 선언의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남뉴스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로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 소초 장병들이 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연남뉴스

## 대북 확성기 역사속으로… 철거 시작

‘판문점 선언’ 발표 따라 실시

군 당국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일 최전방 지역의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가 시작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예고한 대로 오늘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운영하는 국군심리전단은 확성기 제작업체의 안내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기로 한 것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우리 군은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군 당국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첫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는 셈이다.

군 당국은 최전방 지역에서 40여대의 고정식·이동식 대북 확성기를 운용해왔지만, 현재는 가동 중단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

군 당국은 차량형 이동식 확성기를 철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정식 확성기를 철거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선제적으로 철거하는 데 호응해 북한도 순차적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대부분 고정식 확성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철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시작돼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시설도 철거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재개해 최근까지 가동해왔다. /최신용 기자 grandtrust@